

# 대법관 후보 3인 국회 인준 문턱 넘을까

오늘 동의안 표결 ... 노정희·이동원 후보 잡음 없이 무난 김선수, 다운계약 논란에 진통 예고...한국당 "사퇴해야"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이날 국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자질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여야 청문위원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나 도덕성 등 자질 검증 측면에서 별다른 공방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지난 23일과 24일에는 김선수·노정희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26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일단,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놓고는 진통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김 후보

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2007년)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임,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는지 여부에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본회의 임명동의 표

결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12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4석), 민중당(1석) 등 '진보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6석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도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당 1석으로 구성된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과반이 돼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 김부겸 "여순사건 다시 정리돼야"

행안위 전체회의...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 필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우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진실화해위) 출범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지적에 "가해 쪽도, 피해 쪽도 아픈 상처가 있고 내용을 모르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입법을 통해 국회나 진실화해위에서 다양한 아픈 경험이 공인되고 국민들에게 승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여야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출범해 민간인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한 뒤, 2010년 12월31일 활동을 마쳤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지난해 4월 발의했으며 국회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 의원은 "2기 진실화해위를 출범시키고 과거사 법으로 여순 사건을 다룬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한계가 크다"며 "제주·거창·노근리 등 양민학살 사건은 모두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여순 사건이 올해 70주년을 맞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순 사건에 맺혀있는 피눈물을 이제라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정동영 "호남이 평화당 살려달라"

광주시의회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권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5일 "민주평화당이 있는 것이 광주와 호남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에서 민주평화당을 살려주면 민주평화당이 살고, 필요없다고 손을 놓으면 민주평화당은 살 길이 없다"며 "민주평화당 전신인 국민의당을 선택해 광주 8석, 전남 8석을 밀어줬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현재 당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쓰나미에 천막이 날아가고, 주춧돌만 남았다. 정신을 차려 제대로 된 집을 짓겠다. 평화당은 대

목수가 필요이상 상황이다. 견습생 목수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단 시간에 30%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든 경협을 살려 평화당의 집과 배를 만들어 다음 목적인 총선에 도달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당 대표가 되면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정치자금법을 포함)을 위해 자유한국당 연대하겠다. 70년간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다당제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임종석 靑 실장 조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회찬 빈소, 무더위 잇은 조문 행렬

정치인·시민 발길 줄이어...정의당 당원 가입·후원금 증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별세 사흘째인 25일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는 더운 날씨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빈소를 찾았고, 일부는 조문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흐느끼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입관식을 참관한 노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서자 조문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전날 내걸린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은 시민들의 추모글이 담긴 노란 포스트잇으로 꽉 채워지기도 했다.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해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노 의원과 함

께 드루킴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날 오전 9시30분께 부인과 함께 조문했다. 이 밖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철가 조정래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뵈을 기렸다. 임 실장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드릴 말씀이 없고,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도 힘들어하신다"고 전했다. 한편, 노 의원 별세 후 정의당에 당원 가입과 후원금 납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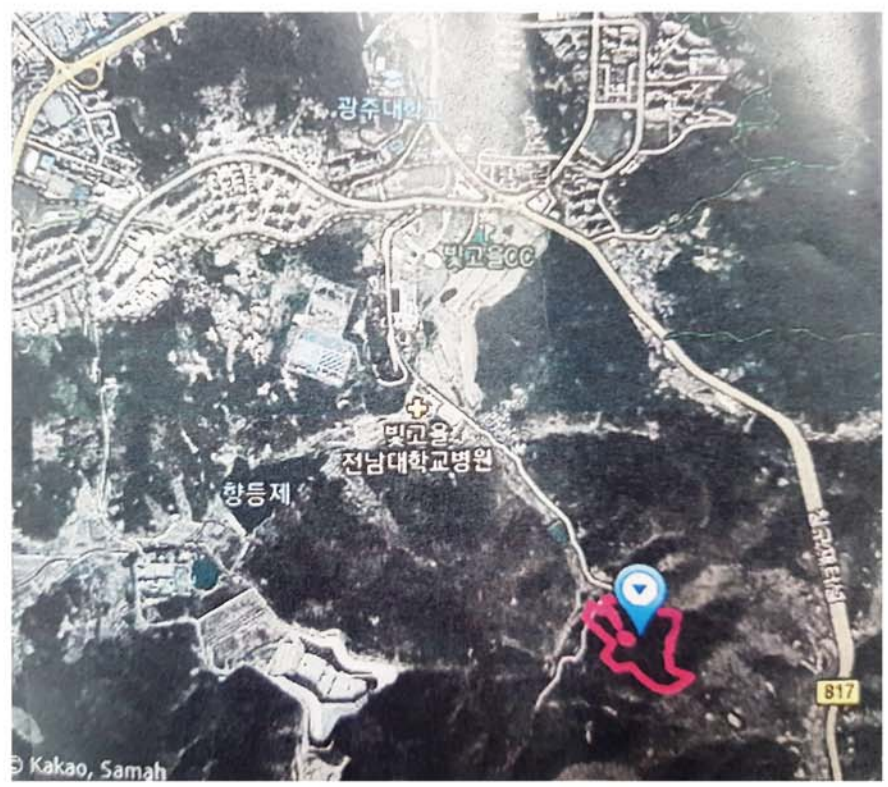
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입당도 증가하고, 후원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빈소에 오신 조문객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 정의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 의원 별세 후 일반계시판에는 후원계좌를 요청하거나 유료당원에 가입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의당은 하지만, 노 의원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당원 가입과 후원금 증가 수치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자제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 한국당 비대위 공식 출범 첫 회의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체제 공식 출범 첫날인 2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현충원에서 비대위원 8명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윤영석·배현진 대변인 등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

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찾았으며, 이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비대위 활동 계획과 당 쇄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장 한 쪽 벽면에는 "책임과 혁신"이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걸개가 걸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